

민생도 집값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반복'

與 '지역업 손실보상 소급불가' 가닥 주택공급 하겠다는 과천부지 "철회" 날벼락 맞은 시장, 黨政 행보에 비판

조변석개(朝令暮改). 정부·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부동산·코로나19 피해보상 정책을 뒤집어 정책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은 6일 당정 회의를 열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유희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과천청사 유희지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하지 열 달 만이다. 당정은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체지를 제시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서울 노원구와 1만 가구 규모 태릉골프장(CC) 공공주택 사업 변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과천에서 후보지를 바꾸는 선례를 만든 이상 다른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변경 요구가 이어지면 주택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다리다 지친 청약 대기자가 재고주택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집값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급작스레 주택 정책 방향이 바뀐 건 공급 분야뿐만이 아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도 정부의 변심에 날벼락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 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과세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만든 새로운 재산세·양도세·중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날(6월 1일)을 앞세우고 있다. 당정은 이달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과 관련, 법안에 '소급 적용' 명시 배제로 가닥을 잡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이나, 별도 부칙 또는 규정을 담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을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당정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치권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거세다. 박종화 기자 pbell@, 김윤호 기자 uknow@



文 "지켜주지 못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를 만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위로했다. ▶관련기사 9면 연합뉴스

G7 "최저 법인세율 15%" 조세개혁 합의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합의하고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2013년 시작된 협상이 마침내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된 역사적 합의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관련기사 10면

기업 소재지가 아닌 매출을 창출하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최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에 할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리콘밸리 공룡들이 이에 대부분 해당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은 불리하지만, 법인세 인하

경쟁을 종식하고자 통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다.

이번 회의는 4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법인세율 하한 기준을 설정하자고 각국에 요청한 후 소집됐다. 옐런 장관은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율로 인해 자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은 모두 G7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코인 잡겠다는 금융위, 입법은 뒷짐

스페셜 리포트

주무부처 지정前 관련법 3건 발의 "소위 논의때 의견" 소극적 자세 일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뒤늦게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도권화의 기초가 되는 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주무 부처가 된 금융위원회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5면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당초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뤄진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법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부처 협의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가상자산사업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안 3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안들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는 3개 의안 모두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제도권에서 형성됐음에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600만 명에 육박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사 기준)하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0조 원을 훌쩍 웃돌 정도로 비대해졌다. 금융 시장의 하위 개념이 아닌 새로운 권역이 조성된 만큼 가상자산업권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면 기초가 되는 법의 틀이 중요하다.

시장의 중요성과 달리 법 제정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일반적으로 법안 제정 시 주무 부처가 먼저 결정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처가 중심이 돼 법안의 초석을 다진다. 그런데 가상자산업권은 주무 부처가 정해지기 전에 이미 의원입법안이 나왔다. 금융위는 의원입법안들이 정부위에 상정돼 논의하면 그때 의견을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떠밀리듯이 맡겨진 만큼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법 제정에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원 입법 절차상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 주무 부처 참여가 보편적이지만,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주무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정부가 손놓고 있던 시장을 금융위에 맡겼다고 했으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화하면 질타받을 일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이기에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크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 | | | |
|--|---|---|--|
| 기업·개인 통합뱅크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 대출·기간연장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간 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 | 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 경영 지원 세무,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
|--|---|---|--|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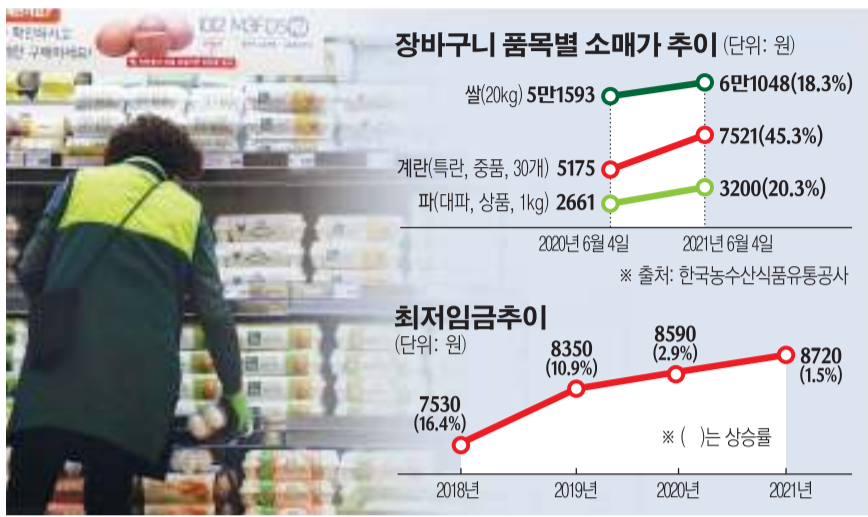
쌀 20kg '6만1048원'·계란 한 판 '7521원' 치솟는 물가에 초라해진 밥상

직장인 이 모씨(41)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너무 오른 먹거리 가격에 깜짝 놀랐다. 계란 한판(30알)은 1만 원이 넘었고, 대파 한 단, 사과 1개도 3000원이 넘었다. 가공식품도 비싸졌다. 콜라와 사이다는 이전보다 100원 이상씩 가격이 올라 장바구니에 담기 망설여졌다.

지난해 긴 장마로 작황이 부진했던 농축산물 가격이 올 들어서도 널뛰고 있다. 여기에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치솟은 계란 값도 떨어질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쌀과 밀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즉석밥, 빵 등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가격이 인상되며 소비자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서 계란 한 판에 1만원=6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상승하며 2년 1개월만에 2%대를 넘어섰다. 특히 신선식품과 외식 물가 인상이 두드러졌다.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매가로 보면 4일 기준 대파(상품, 1kg)의 소매가는 3200원으로 1년 전(2661원)보다 20.3% 뛰었다. 최고조에 올랐던 2~3월에 비하면 파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가격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과일 가격도 급등해 사과 후지 상품의 소매가는 10개에 3만2565원이다. 평년(1만9877원)에 비해서는 무려 63.8% 뛰었다.

쌀 20kg의 소매가는 6만1048원으로 1년 전(5만1593원)에 비해서 18.3% 올랐고, 평년(4만6405원)보다는 31.6% 치솟았다. 쌀값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50일 넘게 계속된 장마와 태풍, 일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I 여파에 공급이 줄며 특란 계



사과 63.8%·라면 2.8% 등 소비자물가 25개월 만에 2%대↑

‘오레오’ 10년 만에 200원 올려 CU·GS25 등 택배비 인상 예고

란 1판(30개) 중품의 평균 소매가는 7521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5175원, 최근 5년 평균인 5284원에 비해서는 2300~2400원 오른 수치로 6500원을 넘나들던 연초보다도 1000원 더 비싸다. 실제 소비자가 소매로 구입할 수 있는 계란 가격은 대부분 1만 원이 넘는다. 다만,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계란 가격이 6월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6월 축산관측’에 따르면 6월 하순부터 계란 일평균 생산량이 4200만 개를 초과해 계란 산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식 물가 역시 올 들어서만 1월 1.1%가 인상된 것을 비롯해 매월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에는 1.9%나 올랐다. 라면, 치킨 가격도 크게 뛰었다. 라면(외식)은 2019년 12월(3.5%) 이래 가장 높은 2.8% 인상됐고 치킨도 2.4% 상승했

다. 햄버거 가격은 6.1%, 김밥도 4.2%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 택배비도 비싸져=공산품도 가격이 뛰긴 마찬가지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오레오 초콜릿 크림·하이 트크림 가격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다. 오레오 가격 인상은 2011년 동서식품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연초에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푸레쥬르가 90여 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9%씩 인상했다. 쌀 가격 오름세에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1600원에서 1700원으로, 김밥 20여 종 가격은 300원씩 올렸고, 동원F&B는 즉석밥 ‘썬쿵’ 7종 가격을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1% 인상했다.

코카콜라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카콜라 캔·페트병 가격을 지난 1월 개당 100원씩 인상한 데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칠성 사이다와 펍시콜라, 레스비, 핫식스 등 일부 음료 제품 가격을 평균 4.7% 올렸다.

편의점 택배비도 인상된다. CU는 15일부터 택배비를 최저 2600원(무게 0~350g, 동일권역 기준)에서 29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 GS25도 다음 주 초 택배비 인상 폭과 시점을 공지할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국제 해커조직>

<테슬라 최고경영자>

‘어나니머스’ 타깃 된 ‘머스크’

트위터에 비트코인 결별 암시
성인물 관련 코인 띄워 시세 요동
“시민 조롱, 임자 제대로 만났다”



터에 액체를 나타내는 이모티콘과 로켓 이모티콘, 화살표와 달 이미지를 올렸다. 이를 두고 트위터 사용자들은 액체와 로켓과 직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말 한 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그간 전기차 기술로 쌓아 왔던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는 무너지고 머스크는 ‘냉소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이란 해시태그와 깨진 하트 모양 이모티콘, 이별하는 남녀 대화를 담은 이미지를 올렸다. 머스크가 해당 트윗을 올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5% 넘게 하락했다.

같은 날 저녁 머스크는 뜬금없이 트위터에 캐나다(Canada), 미국(USA), 멕시코(Mexico)의 이름을 순서대로 쓴 게시물을 올렸다. 세 국가 이름의 앞글자만 따오면 CUM이 되는데, 이는 남성의 정액을 일컫는 속어다. 머스크는 이어 트위터

트윗을 조합해 성인물 콘텐츠 거러에 쓰이는 가상화폐 ‘컴로켓(CumRocket)’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했다. 이 영향으로 컴로켓 가격은 한때 0.0548달러에서 0.2481달러로 352% 폭등했다.

한때 머스크의 트윗에 환호했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제 분노하고 있다. 그의 트위터 계정에는 욕설과 함께 “시장 조작 트윗을 중단하라”, “비윤리적인 쓰레기”라는 항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업체 어웨이오 분석에 따르면 머스크의 평판지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4개월 만에 25%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적인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는 이날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는 시민을 조롱했다”며 “당신은 이제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고 공격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직장인 61% “우리 회사 디지털 대응 미흡”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음에도 국내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7%만이 소속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미흡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1.3%에 달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생산, 마케팅 등 업무 전반에 접목해 기업 운영을 개선하고 가치를 혁신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부문별로 대응수준을 보면 비대면 회의

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수행’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생산이나 마케팅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문도 긍정적 평가가 앞섰다.

‘디지털 인재 육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낙후된 제도 및 사회 인프라(3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 내부 문제를 걸림돌로 지적하는 직장인도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변화 의지 부족(31.8%)’과 ‘경직된 조직문화(20.5%)’, ‘기술력 부족(9.6%)’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지난 20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1가구는 KOEN의 에너지와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한국판 그린뉴딜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20살 KOEN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new renewable energy

탐라해상풍력 전경

與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소급과 비슷한 효과 지원책 마련, 보상 시점은 추후 논의” 당 내부서도 의견 충돌... 기재부·중기부 “소급 불가” 확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 거셀 듯...정책 신뢰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집중하고 손실보상은 시점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고 우선 법을 통과시킨 뒤에 정부와 보상 시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별도 지원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손실을 본 분에 대해 보상을 하고 부족한 건 재난지원금 등으로 메꿀 부분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은 야당이

쓰는 용어이지 우리 당이 쓰는 게 아니다. 정부와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정해야 하고 그 후에 보상 시점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임을 상기하며 “8월이 돼 봐야 정부와 언제부터 보상할지 시점을 정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할지도 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산출의 어려움, 막대한 행정비용, 형평성 문제 등 난점이 많다”며 “당장 법안에 소급적용을 넣는 것이 무리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별도 부칙이나 규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상 시점은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을 통과시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에 소급적용을 다시 추진하는 건 어려운 것으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상무지구 상인회 회원들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보인다. 손실보상이 국회를 떠나 행정부로 넘어간 데다 추가 지원까지 시행한 상태에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의 부칙이나 규정으로 소급적용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여야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47명이다. 기재

부 불가론에 수긍해 완전한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애당초 소급적용이라는 용어를 꺼낸 때부터 이미 손실보상법은 난항이 불가피했다”며 “현실적으로 지나친 행정력 낭비와 보상액 산정 어려움, 형평성 논란 등 탓에 완전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갈피를 못 잡다 결국 소급적용

불가로 정해지면 혼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산자위 입법 청문회까지 열어 기대감을 키워놓은 상태라 더욱 그렇다. 당정이 내놓은 단일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야권이 관련한 비판을 쏟아낼 것이고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표출되면, 그만큼 반발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uknow@

태릉·용산·노원 등 곳곳서 반대운동 휘청이는 공공주택사업

“지자체·주민 사전 논의 없이 강행” 사업 후보지 주민들 ‘반대’ 목소리 수요자 불안 확산 ‘패니버닝’ 우려

주택 공급 놓고 갈등 빚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단위: 가구)

| 지역 | 부지 | 규모 |
|--------|-------------|------|
| 서울 노원구 | 공릉동 태릉골프장 | 1만 |
| 서울 용산구 | 용산역 철도정비창 | 1만 |
| | 남영동 캠프킴 | 3100 |
| 서울 서초구 |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 1000 |
| | 서초동 국립외교원 | 600 |
| 서울 마포구 |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 3500 |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후보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과 사전 논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를 낙점한 후유증이 다.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주민 모임인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용산역 정비장과 옛 주한미군 캠프킴 기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용산역 정비장과 캠프킴을 각각 업무지구와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도 최근 캠프킴 일대를 상업·업무·문화 기능을 갖춘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했다. 중앙정부 계획과 어긋나는 구상이다.

용산역 정비장과 캠프킴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 공공주택사업의 핵심이다. 용산역 정비장은 1만 가구, 캠프킴엔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용산역 정비장은 당장 내년 3000가구가 사전청약(분청약보다 1-2년 일찍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측은 “주택 공급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정비장, 캠프킴 등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제는 공공주택 공급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곳이 용산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에서만 노원구(태릉골프장),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국립외교원·서울지방조달청) 등이 국토부에 공공주택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선 국토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을 모르고 있었다. 국토부가 보안을 이유로 공공주택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소통 부족은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미 경기 과천시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에 끝에 정부과천청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됐다. 정부-여당은 과천청사 유유지 대신 인근 과천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13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대체지도 찾기로 했다.

국토부는 △양호한 입지 제시 △기존 계획을 넘는 대체 공급 물량 제시 △지자체 협조 등을 주택 공급 계획을 바꾼 이유로 들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공공주택 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와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급 물량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되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체지를 구한다고 해도 부지 물색이나 공급 계획 수립 등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거둬드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수요자들이 ‘패니버닝’에 뛰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생각에 지자체, 주민과 사전 논의를 생략했던 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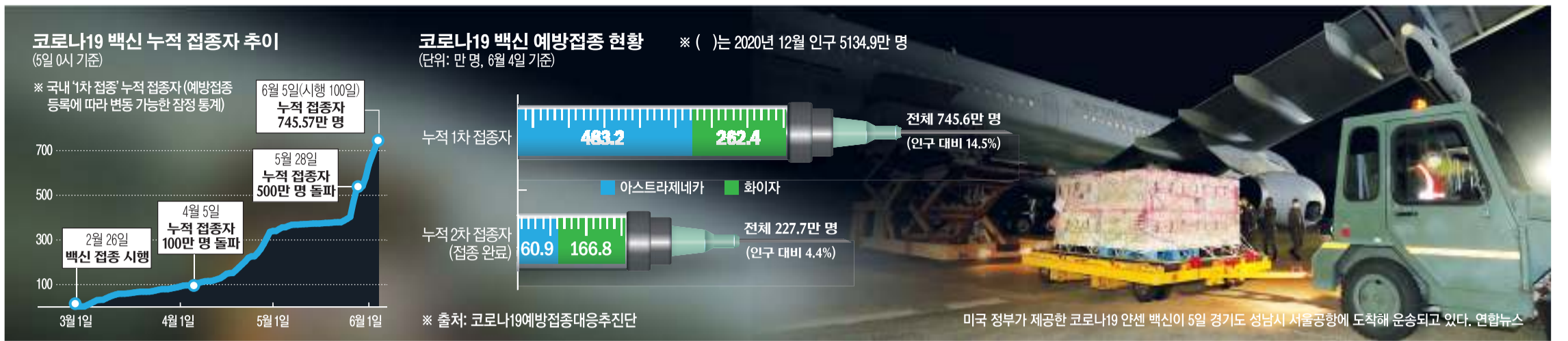
다양한 삶의 모양만큼
각자가 원하는 행복은 다르니까

무엇을 원하든 당신에게 딱 맞는 보장으로

더 두근거리는 매일을 마주할 수 있게
한화손해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매일이
빈틈없이 행복하게**

LIFE PLUS 한화손해보험



접종 100일 만에 700만명, 이달 700만명 더 맞는다

국민 15% 백신 1차 이상 맞아 60세 이상 예약률 81% 기대 이상 美 공급 안센 국내 도착 수급 여유 이달 말 접종 배지·스티커 제공

100일을 맞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상황이 순조롭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알파(α)'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이 14만1000명 늘었다

고 밝혔다. 이 중 13만8649명은 1차 접종자, 2351명은 2차 접종자다. 누적 접종자(1차 이상)는 759만5072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14.8%로 집계됐다. 상반기 접종대상 1217만8856명 중 접종 예약자는 1031만6348명이다. 이 중 272만1276명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7일부터 60~64세 311만7616명(예약자), 10일부터 30~59세 예비군·민방위대원과 국방·외교 관련자 89만2393명(예약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예약자의 접종률이 99.8%에 달해 일정대로라면 상반기 접종자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백신 도입량도 충분하다. 5일 기준 국내

백신 잔여량은 아스트라제네카(AZ)가 519만6600회분, 화이자가 104만2200회분, 모더나는 5만4700회분, 안센은 101만2700회분이다.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 백신은 1·2차 접종자 병목으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주 일정한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접종 순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며 "어제까지 전체 국민의 14.8%에 해당하는 76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60세 이상의 접종 예약률도 80.7%로 애초 기대치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국민은 19일까지 잔여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며 "근처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명단에 등록하거나,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당일 잔여 백신을 예약해서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6일 회의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관리 계획'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재고량은 2일

기준 약 2억 정(캡슐)으로, 6월까지 예정된 예방접종 목표 인원(800만 명)의 예상 필요 수량인 8000만 정(1인당 10정 계산)을 충족할 수 있다. 7월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식약처는 제조업체의 생산량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방 목적이 아닌 발열 등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만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배려해 이달 말부터는 '접종 증명 배지·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배지·스티커 자체는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증명력이 없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돌아오라 유럽으로, 빗장 푸는 관광대국

EU, 韓·日 등 8개국에 관광 허용 역내 여행활성화 위해 '백신여권' 아시아선 태국 푸켓 재개방 나서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발판 삼아 여행에 대한 빗장을 풀기 시작하면서 올해 여름 휴가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행 재개에 대한 방침이나 관련 규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미 상당수 국가가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문호 개방 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유럽 관광대국들이 여행 재개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5일(현지시간) CNN이 소개했다.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은 관광과 같은 비필수적 여행이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등이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였는데 EU 집행위원회(EC)

주요국 여행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출처: CNN

| | |
|-------------|--|
| EU | - 내달 1일부터 백신여권 도입 -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 포함 |
| 프랑스 | 9일부터 아간통행금지 9시 → 11시로 |
| 스페인 | 7일부터 EU 역외 백신 접종 여행자 입국 허용 |
| 키프로스 | 미국·영국 포함 65개국 백신 접종 여행자 입국 허용 |
| 아일랜드 | 7월 19일부터 EU·영국·미국 백신 접종 여행자,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받고, 자가격리 후 여행 허용 |

는 3일 일본도 포함했다. 세계적인 관광지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3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형 유람선이 들어와 관광산업 재개 기대를 한껏 키웠다. EU는 7월 1일부터 이른바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 독일, 체코, 덴마크, 불가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7개 회원국은 이미 이달 초부터 자

발적으로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EU는 역내 회원국에 입국 시 72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거나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도록 권고해 왔다. EU 회원국의 개별 움직임도 분주하다. 그리스의 경우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외국인 여행객이라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9일부터 이른바 EU가 정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들과 유럽 회원국 등 '녹색' 리스트에 있는 국가의 여행객이 규제 없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아간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늦추고, 카페와 레스토랑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 30일에는 통금을 완전히 종료하고, 백신 여권과 같은 보건 증명서

소지자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행사 참여를 허용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던 아일랜드도 규제 완화 방침을 정했다. 아일랜드는 다음 달 19일 EU 회원국과 영국, 미국인 여행객 대상으로 여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비(非) EU 회원국 여행객이면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도착 후 자가 격리를 해야 여행이 허용된다. 스페인은 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EU 역외 입국자들의 여행을 허용하며 네덜란드는 '코로나19 위험이 낮은 안전한 국가' 리스트의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유럽 외에도 카리브해 세인트루시아와 알제리, 아부다비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태국도 대표 관광지 푸켓을 중심으로 여행객에 대해 재개방에 나선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변이종 집단감염 계속 거리두기 방침은 금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와 맞물려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보육시설, 종교시설, 일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잇따른 탓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56명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541명이다. 최근 1주간(집계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589.4명으로 직전 1주(547.1명)와 비교해 42.3명 늘었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가파르다. 6일 낮 12시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화성시 유치원·어린이집(총 10명)과 대전 서구 호프집(총 13명), 중구 교회(총 15명), 광주 광산구 동전노래연습장(총 9명), 전남 화순시 카페(총 6명), 강원 횡성군 골짜기(총 9명)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특히 경북권은 변이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일반·유형주점발 집단감염이 'N차 전파'로 이어지면서 연일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청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지속하고 있고, 대구와 제주지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집단감염이 계속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가파른 확진자 증가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이 안정돼야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제검사와 역학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제때 강화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항공·여행주 고공행진

대한항공 5월 이후 23% 급등 증권사 목표 상향 일부 신중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속도를 내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지난 달 이후 23% 넘게 올랐고,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강도 28.82%가 상승했다. 저비용 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역시 9.95% 강세를 보였고, 티웨이항공도 53.07% 급등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 직전까

지갔던 여행사들의 주가도 지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달 이후에만 하나투어가 32.32% 강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 1월 최고가(5만6900원)를 훌쩍 넘어섰고, 모두투어(30.75%), 참좋은여행(40.52%), 레드캡투어(11.11%) 등도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호텔신라도 11.79%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2.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은 두드러진다. 증권가 역시 이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백신 1차 접종률

이 10%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주로 언급되던 항공, 여행, 호텔, 카지노 등 산업군에 속한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서 "한국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할 경우 관련 주식들의 주가 상승폭은 지금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이미 알려진 호재로 오르는 것이라며 추격 매수에 신중을 주문하고 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미 많이 알려진 호재"라면서 "변종 바이러스로 여행 수요 회복이 변동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한항공에 대한 목표주가를 40.9% 상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HOLD(보유)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국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사태로 된서리를 맞았던 항공주와 여행주가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른 '리오프닝'(경기재개) 기대감에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달 이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여행레저'의 수익률이 15.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ETF는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강, 여행사인 하나투어,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호텔·면세점 사업을 하는 호텔신라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이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은 부처 간 교통정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인터뷰를 진행했고, 시장 관리 방안이 나온 이후 서면 인터뷰가 한 번 더 이뤄졌다. 윤 의원은 두 번의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해 온 정부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관리 방안 교통정리 수준”=윤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시장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했다. 주무 부처가 된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책임에서 발을 빼는 모습도 문제로 봤다.

윤 의원은 “(이번 발표는)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는 등 책임을 분산·회피하려는 행태를 공식화한 부처 간 교통정리 수준에 불과했다고 본다”며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아닌 주관부처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과 거리 좁히기를 애써 거부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 발표 이

지난달 발표한 ‘관리방안’ 미흡 은행 힘 빌려 거래소 정리하려 해 중소형 거래소 통폐합 운영하고 지원과 규제의 동시적 접근 필요

후 금융위가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주관한다”며 ‘주무 부처’가 아닌 ‘주관 부처’로 지칭한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세미나 같은 행사를 하면) 주최자는 책임을 지지만 ‘주관’자는 단순 실무만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금융위가 주관부처 역할을 자처하며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가는 모습은 웬지 어색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거래 통제를 뒷전으로 미뤄 온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해 왔다. ‘3무(무책임·무대책·무방비)’로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히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들과 실명 계정을 맺지 못한 거래소는 사업 신고를 할 수 없고 폐업된다. 결국 거래소의 폐업 여부가 계정 발급의 주도권을 쥐 은행에 달린 셈이다. 4일 현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차도살인(借刀殺人)·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 뜻”으로 은행의 힘을 빌려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규제 대상일 뿐이지 진흥 대상이 아니다 보니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관청은 중소형 거래소도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산업육성 대책 마련도 필요”=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행정 공백 상태

에도 우려를 표했다. 시장 감독을 위한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 부처가 여전히 시장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의 개념과 정의, 대상, 규제 방향 무엇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공백’ 상태로 여러 의원이 각자 주장을 담은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폐쇄 위기에 처한 중소형 가

상화폐 거래소를 통폐합하는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블록체인, 코인 기술을 결합해 관청은 중소형 거래소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중소형 거래소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와 함께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지원과 규제의 동시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수단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자산 등으로 분류·확정한 후, 자금세탁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특정 산업군에 포함한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규제하는 동시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국형 ‘K코인’, ‘K가상자산’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글/서지희 기자 jhsseo@

사진/고이관 기자 photoeran@

가상자산 시장 현황

| | |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60여개(5월 20일 기준) |
| 거래소 가입자 | 581만 명(4월 말 기준) |
| 4대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대금 | 약 22조 원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

가상자산 거래 부처별 추진업무

| | |
|--------------|---|
| 금융위 |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
| 과기정통부 |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 |
| 검·경 |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 등 |
| 공정위 |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
| 개인정보위 |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
| 국세청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 |
| 관세청 |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

은행, 코인거래소 계약 연장 고심

새 고객 유치 등 장점 있지만 투자자 피해엔 책임 후폭풍 실명계좌 조건부 발급 검토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실명 인증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관리·감독에 대한 틀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만큼 계약 연장을 선불리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들은 기존 계약 갱신 단위를 이전보다 축소하는 등의 조건부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은행별 제휴 기한은 케이뱅크는 이달까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음달까지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에 은행과의 실명인증 계좌 제휴 계약 갱신은 필수적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 계좌 등의 조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더러 향후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선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부산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면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책임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이 있다. 자금세탁 사고 등이 발생하면 결국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은 계약 연장에 따른 득과 실이 분명히 있는 만큼 계약 연장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은행들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심사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 특금법에서 요구되는 항목별 심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권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에 따라 거래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은행이 신규 계약은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사적 영역에서 거래소의 존폐가 결정될 시 투자자 피해에 따른 후폭풍을 오롯이 은행이 감내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6개월 단위 연장이 아닌 3개월만 연장을 한다는 등의 조건부 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비타민B는 역시 비맥스

자세한 설명은 약사님이 하신다.

강력한 피로 회복엔 비맥스 메타정

비스벵티아민 함유, 비타민 B군 100mg, B12 500µg 함유
허가 및 제조권자: (주)한홍제약
영안후제약
광고심의일: 2021-1568-0040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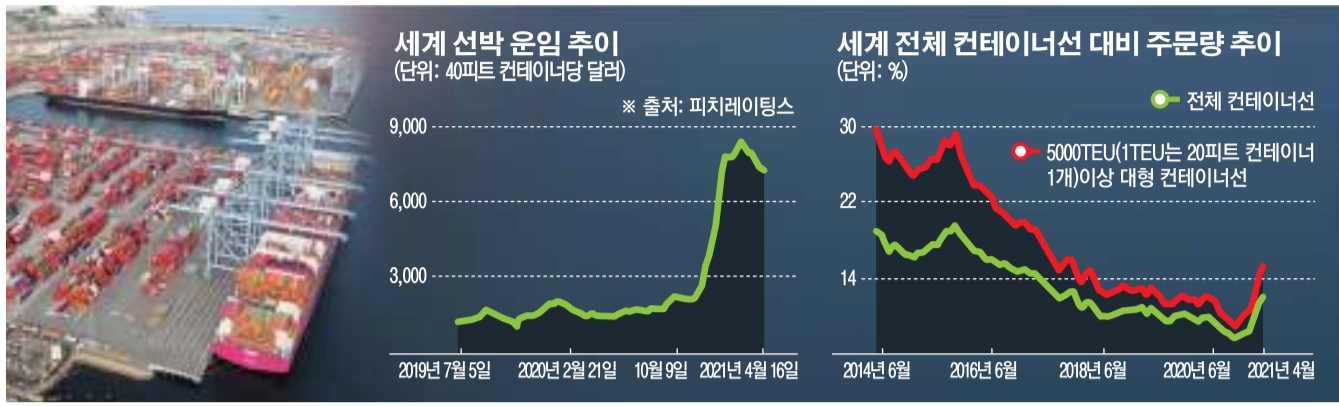
'인플레 유발자' 찍힐라, 호황에도 웃지 못하는 해운업계

물동량 급증 컨테이너선 태부족 수에즈 사태 등 운임 상승 부채질 침체기 우려 선박 건조 망설여 기업 인수 등 공급망 확보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전례 없는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초기, 이동 제한으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컨테이너선들이 늘었다. 이후 예상을 넘어선 물품 수요 급증에 컨테이너선이 부족한 상황에 몰렸다. 전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운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속내가 편하지 않은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운업계 상황은 1년여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1년 전 중국 공장들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해운업체들은 운항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허브인 싱가포르 항구에는 정박한 컨테이너선이 늘어났다.

상황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역전됐다. 코로나에서 탈출한 중국이 생산을 정상화



하면서 공장들이 밀려 있던 주문을 소화, 물류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면서다.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변화도 물류 증가를 부채질했다. 코로나 여파로 집에 머물게 된 사람들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한 것이다. 중국산 전자제품과 소비재 수요가 치솟았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20%가량 증가했다. 이외에도 아시아 항구에 정박한 컨테이너들은 요가 레깅스, 튀김 기계, 잔디 깎는 기계까지 운송 대기 중인 상품들로 꽉 찼다. 화장지 제조업체 매출은 2주 만에 7배 늘었고 1년치 재고를 두 달 만에 판매 종료하는 업체들이 속출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최대 항만

시설인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항에 컨테이너선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올 1월에는 미국 두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이 30척을 넘어섰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소화할 컨테이너선이 부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선박 생산이 35% 감소한 여파다.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확대된 선박 크기에 비해 이를 수용할 항구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병목현상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화물 운임의 끝없는 상승을 초래했다. 올 초 미국 텍사스주 한파와 3월 에버그린호의 수에즈운하 좌초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물류대란과 운임 고

공행진에 기름을 부었다. 에버그린호가 좌초된 6일 동안 추산된 손해액만 하루 96억 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해운컨설팅업체 드류리에 따르면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새 4배가량 뛰었다. 사이먼 헤니 드류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공급망 혼란, 운임 급등 등 모두 그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지난 20년간 이 정도의 혼란을 겪었던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선박 물품이 예정대로 도착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성은 1월 34.9%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해운업계가 물동량이 늘어난 상황을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기회복 둔화 등 역효과가 커질 수 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경기 수요가 급속히 개선되는 것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높아져 세계 경제 회복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황기라고 선박 건조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침체기가 오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간 지속했던 암흑기가 대표적 사례다.

이에 해운업체들은 더 많은 '블랙스완(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화물 운송업체와 창고 운영자 등 다른 공급망 기업 인수에 나섰다.

세계 5위 컨테이너 선박회사인 하파그 로이드는 지난달 아프리카 항로에 잠정이 있는 컨테이너선사 나일더치를 인수했다. 지난달 프랑스 선사 CMA CGM은 유럽과 북미 사이를 비행하는 4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입했다.

세계 1위 해운업체 머스크는 지난해 미국의 재고 유통 관리 전문기업인 퍼포먼스 팀과 KGH 커스텀 서비스를 인수했다. 운송과 서비스 부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IT서 '물류대란' 해법 찾는 기업들

재고 추적 등 AI 도입 비용 절감 블록체인 통해 문서 작업 간소화 자율운송 기술도 상용화 테스트



볼보의 자율주행 전기 트럭 베라.

전 세계 기업들이 최첨단 IT 기술로 물류대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물류업계가 가장 먼저 주목한 기술은 인공지능(AI)이다. A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공급망 본연의 복잡성과 프로

세스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술은 이미 해운과 물류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빠르게 침투해 필수 기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운송 속도 향상과 원활한 재고 추적, 이를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AI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는 기업 경영진이 늘어나고 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 설문조사에서 경영진의 61%가 AI 기술을 공급망에 도입한 결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경영진은 64%였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매

체 테크톡스는 물류 부문에서 AI 기술을 접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채택 분야를 넓히고,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기술도 물류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다. 스웨덴 자동차기업 볼보(Volvo)는 전기 트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대형 화물의 단거리 운송 프로젝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는 AI 개발업체 엔디비아를 비롯해 물류 회사 DFDS와 항구운영업체 APM터미널과 협력하고 있으며 스웨덴 예테보리 항구 지역에서 자율운송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의 닐스 예거 자동화솔루션 사장은

"자율운송은 물류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생산성과 안전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예테보리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른 항구에서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상화폐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와 함께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을 통해 거래를 기록해 악의적이고 임의적인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을 물류 프로세스에 적용하면 이제까지 운송에 수반됐던 이메일과 전화통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이나 착오 가능성을 차단해 물류의 안정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모두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30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한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K-그린이 혁신이다

SK이노베이션의 한걸음 한걸음이
K-그린의 위대한 길이 되도록

최고로 안전하고 가장 멀리 가는
친환경 배터리로 세계를 달립니다
환경을 위협하는 '탄소발자국'이
지구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세계를 놀라게 할 **K-그린**,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그 시작을 함께 합니다

Hi K-Green *Hi*!Innovation

〈일시적 경기 후퇴〉

“한국 경제 회복 속 하반기 ‘소프트패치’ 가능성”

한국 경제가 빠르게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했지만, 하반기 소프트패치(Soft Patch·경기 회복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인 경기 후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식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할 경우 신용 시장의 긴축 발작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충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회복 강화 속 소프트패치 가능성 우려” 보고서를 발표하고 “2분기 한국 경제에선 수출 및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고 내수 부문도 빠르지는 않지만,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4월 이후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소매판매 증가율이 2%대를 유지하며 선방했고, 설비투자 부문도 비(非) ICT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 경기와 수출 부문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수출 경기의 경우 5월 전년 대비 수출 물량이 45.6%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같은 달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5.2를 기록하며 지난

**현대경제연구 “美 조기 테이퍼링엔
신중국 긴축발작·인플레 가속”
코로나 상황·백신접종 속도 관련
“출구정책 마련·물가 억제 필요”**

3월(100.5) 이후 기준치 100을 3개월 연속 웃돌고 있다.

연구원은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접종 속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긴축발작(Taper Tantrum)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실화를 꼽았다.

연구원은 “최근 미국 실물 경제 지표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고, 통화정책 정상화(출구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테이퍼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5월 연준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물가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 물가 불안(inflation)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2분기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기에 진입했지만, 하반기 소프트패치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원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될 경우 경기 회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가 이러한 하방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정책 마련 △수출 경기 확장을 위한 차별적인 시장 접근 전략 기획 △신용시장 긴축발작에 대비한 대응 능력 확충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 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LG전자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일부터 이달 말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서 유엔환경계획이 제작한 환경보호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사진제공 LG전자

32兆 추가세수로 추경 “일부 나랏빚 갚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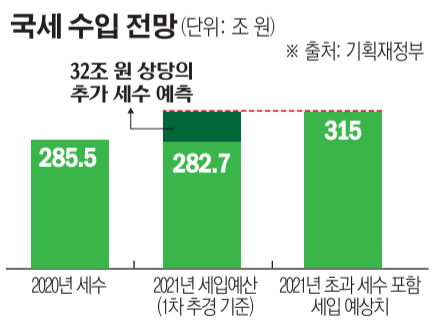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 추경규모 25兆 내의
인플레 유발 우려...재정건전성 급격한 악화 막아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올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더 견딜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이다.

연간 초과 세수 규모는 아직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 원 늘었지만, 여기에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 원 줄었다.

최근 세수 상황과 올해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당정은 올해 32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안은 7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전망,



추경 규모·시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추경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상,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 등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5조~2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재정은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다. 피해계층 지원에는 올해 1차 추경에서 8조1000억 원이 쓰였다. 2차 추경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변수는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다.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면 9조7000억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재정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어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추경 편성으로 급속도로 악화한 재정건전성도 골칫거리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 여력이 생겼을 때 나랏빚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마저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 공급 측 요인이 주로 반영된 수치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요가 늘면, 또 다른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고용부 장관〉 안경덕 “산재 반복 땀 고강도 제재 안전관리 부실 기업, 사업도 못하게”

중대재해법 이르면 이달말 입법예고

안경덕(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관리를 못 하면 사업도 못 한다”고 언급하며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7일 취임한 안 장관은 첫 번째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꼽았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의 안전 확인을 거쳐야만 이를 해제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 보장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도 준비 중이다.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의 막바지 단계로, 노사의 견수령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변환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비농업 청년도 ‘스마트팜’ 관심 후끈

창업보육센터 경쟁률 3대1로 ‘쑥’

미래농업으로 주목을 받는 스마트팜에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208명 모집에 625명이 지원해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은 2.1대1이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전북 김제와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8월 말부터 이론교육 과정 2개월,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 경영형 실습과정 1년으로 최대 20개월 동안 진행된다.

보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 입주(3년·수행실적우수자), 최대 30억 원의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90%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교육 신청자의 평균 연령이 30.3세로 지난해 31.5세보다 1.2세 낮아졌고, 컴퓨터공학, 경영학 등 농업 전공 외의 비중도

지난해 76.6%에서 84.3%로 높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농업 분야 청년들이 미래·첨단농업인 스마트팜을 유망 직종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희망 품목도 지난해 딸기와 토마토, 엽채류 위주에서 올해는 멜론, 오이,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등으로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기초지식부터 농장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강사와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2018년 교육을 시작해 2020년 6월에 수료한 45명 중 38명은 창업, 4명은 스마트팜 선도농장에 취업했다. 2019년 선발한 2기와 지난해 선발한 3기 교육생은 현재 실습과정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3일까지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文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송구”

현충일 추념사에서 처음으로 사과
“한반도 비핵화·평화 위해 큰 걸음”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군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피력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달아 현충일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한반도 정세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민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멈춰섰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진전시

켜 나가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실현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한미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며 북한 바라기와 중국몽을 이어가려 한다”며 “잇따른 군내 성 비위 사건과 부실급식 등의 문제로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기도 두려운 오늘의 대한민국은 호국영령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는 등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보여 대권 도전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사 나누는 宋·金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6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인단 확보가 승패 좌우” 與대권 ‘빅3’ 조직망 총동원

친문진영 ‘빅3 캠프’로 각자도생

이달 말 예비경선이 끝나면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여권 잠룡들은 남은 한 달여 동안 조직 ‘영광’에 나설 전망이다. 경선에서는 당원이나 일반 선거인 모두 동등한 1표를 행사한다. 기존 70만 명~80만 명의 권리당원에 더해 각 캠프가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지가 승패를 결정지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의 최대 주주인 ‘친문’ 진영도 각자 도생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이거나 친문계 의원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인사들이 민주당 대선후보 ‘빅3’ 캠프로 각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의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돕는다. 친노·친문 좌장 격인 이해찬 전 대표 측근인 김성환 이해식 의원도 민주당 평화광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청와대 출신은 정태호 운영찬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무실장을 지낸 김영배 최고위원도 우군으로 꼽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청와대 출신으로 강기정 최재성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 3인방’이 꼽힌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준석 바람 아니다, 당대표 확실” 국민의힘, 벌써 내년 대선 상승효과 기대 2030 이어 중장년도 지지 ‘태풍급’ 격상

“이준석 당 대표 후보 상승세는 바람이 아니라 당선확실이다.”

국민의힘 전 중진위원의 전언이다. 이 후보는 30대 나이로 나경원·주호영·조경태·홍문표 등 중진들을 제치고 1강 당권 주자를 달리고 있다. 이에 당에서는 이미 당선은 확실하다고 보고 내년 대선을 향한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인 3일 발표한 알앤씨 여론조사(1~2일 만 18세 이상 1044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포인트) 상 이 후보는 46.7%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9일 공개된 PNR리플네트 워크리서치 여론조사(지난달 8일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13.9%로 등장한 뒤 수직 상승한 결과다. 2위를 달리는 나 후보는 제자리걸음을, 3위 주 후보는 내리막 길을 걷는 동안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석 태풍’의 주역은 4·7 재보궐 선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6일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사를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과 마찬가지로 20~30대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이 후보가 과거 사회 현안에 대해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회자되며 공감대를 얻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재조명돼 친근감까지 생겨났다. 실제 알앤씨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49%·49.3% 지지를 얻은 반면 나 후보는 각기 13.5%·15%에 그쳤다.

여기에 중장년층도 이 후보에 손을 들어 주면서 2030이 일으킨 돌풍이 태풍으로 격상됐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41.2%, 47.1%, 47.3%로 2030 못지않게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다. 중진 후보들은 이에 전 당대회 탈락 당원 투표 비중이 70%인데 기대를 걸지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에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이들 또한 이 후보 지지율이 57.7% 나 후보(20.7%)를 크게 따돌렸다.

새 당 대표가 이미 정해졌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유다. 한 전직 중진 의원은 “이 후보 당선은 이미 정해진 분위기다. 2030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각 당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조사들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선까지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끌고 갈 거라는 희망도 크다. 2030 지지를 등에 업은 데다 청년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 후보이기에 대선 국면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 후보는 6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누가 대적할 거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재미

공감

품격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하나금융그룹은 ESG 실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두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 2030년 60조 ESG 금융지원 및 조달
- 2050년 사업장 탄소배출량 ZERO 달성
- 2050년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스 ZERO



은행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재개 저조 수익 감소 우려

**녹취·숙려 제도 시행 한 달
하나·농협 일부 상품 영구 중단
금소법까지 펀드영업 악화일로**

은행권이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녹취·숙려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단했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다만 판매 재개율이 24%에 불과해 은행이 아직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 판매의 준비를 완벽히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NH 아문디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 등 7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 역시 'KB스 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 등 11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 고난도 금융상품 5종에 대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 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은행이 투자설명서 등에 담아야 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이 제도 시행 일주일 전에서야 고시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94개(중복 포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를 중단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판매를 중단한 상품 중 재개하거나 재개 예정인 상품은 23개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금융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점차 위축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선 일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현상은 은행의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도

축소될 우려가 크다. 아직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재개하지 못한 은행들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재개할지, 혹은 영구 중단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보완하고 이사회까지 거쳐야 해 판매 재개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금소법까지 시행되면서 은행의 펀드 판매 여건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신임 금감원장, 이상복·원승연 교수 2파전 양상

**공석 한달째 이번주 발표 관심
노조 "교수 출신 후임자 반대"**

새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주에 발표될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현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7일 퇴임한 후 금감원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인 만큼 후임 결정이 더는 미뤄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임 금감원장 유력 후보로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꼽힌다. 당초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석우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함께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근에 이



이상복 서강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교수와 원 교수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이 교수는 변호사 출신(사법시험 38회)으로 2013~2015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증권분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원 교수는 교보약사자산운용 상무이사과 신한BNP파리바자산

운용 상무이사를 거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지냈다. 원 교수는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재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과 같은 '학현 학파'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직이 제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인 윤 전 원장에 이어 후임자도 교수 출신이 유력하게 꼽히자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 노조는 '깎대기는 가라, 교수는 가라'라는 성명서를 내 "문재인 대통령이 금감원을 진정으로 개혁하길 원한다면 교수 출신 원장이라는 욕심을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수 출신 수장에 대해 정무감각

이 떨어지고 금융업계와 소통·조율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했다. 윤 전 원장이 사모펀드 사태를 정리하면서 금융사 징계에 집중해 업계와의 소송전이 이어졌고 이때문에 금감원의 지도권이 실추됐다는 것이다. 이에 학계 출신이 아닌 금감원 내부 출신이 원장에 오를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이 10년도 더 된 키코(KIKO·Knock-In Knock-Out) 사태를 다시 들춰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행했을 때 금감원이 무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번에 또다시 학계 출신이 온다면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카뱅 주식 계좌 서비스 2년 만에 400만좌 개설

카카오뱅크는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주식 계좌 수가 2년 만에 400만좌를 넘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주식 계좌는 서비스 첫해인 2019년 9개월 만에 114만좌가, 다음 해엔 186만좌가 개설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17만좌가 새로 개설됐다.

카카오뱅크의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NH투자증권과 KB증권으로 확대됐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 개설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증권사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위탁거래수수료 우대, 개설 축하금 지급 등 차별화된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식계좌 개설 가능 증권사를 연내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며 "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신한은행, 음식 주문 플랫폼 만든다

신사업 전담 O2O 추진단 신설

신한은행은 금융을 뛰어넘어 고객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비금융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O2O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고객에 한정된 접속자

수와 금융거래를 위한 접속 목적 등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O2O 추진단'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O2O 추진단'을 새롭게 만들면서 전통적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레거시(Legacy)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다.

플랫폼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상품 소싱, 리스크 관리 등은 전문성 있는 은행의 기존 자원을 활용해 신설과 동시에 전격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구축 후에는 서비스 확장 및 플랫폼 개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ICT 인력을 독립 배치할 계획이다.

'O2O 추진단'은 향후 인력, 예산, 시스템, 인프라 등이 완벽히 분리된 CIB(Company in Bank)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로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가 받은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구축을 전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O2O 추진단"은 금융과 비금융을 연결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진옥동 은행장의 의지에 따라 신설됐다"고 말했다. 박찬신 기자 jinsan@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대중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장비의 보유는 서비스 보유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 | | | |
|------|----------|-------|
| 회계관리 | 기업전용 메신저 | 화상회의 |
| 메일 | 전자결재 | 웹오피스 |
| 인사관리 | 내PC 원격접속 | 웹스토리지 |
| 팩스 | 거래처관리 | 명함관리 |
| 조직도 | 문서협업솔루션 | 할일관리 |
| 일정관리 | 노트 | Tedge |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웹툰, 도메인)

車업계 ‘하투’ 핵심 키워드 ‘성과급·투자계획·정년’

전금노 현대차·기아·한국지엠
임금 9.9만원 인상 공동 요구
투자계획 확정 후 고용 보장 촉구
정년 만 64세 연장 노사 진통 예상

완성차 업계 노조 요구안 ※ 출처: 각 사 노조

| | 현대차 | 기아 | 한국지엠 | 르노삼성 |
|-----|--------------------------|----------|----------------------------|--------------------------|
| 임금 | 9만9000원 인상 | | | 7만1687원 인상 |
| 성과급 | 당기순이익 30% | 영업이익 30% | 통상임금 150% +격려금 400만 원 | 700만 원 |
| 기타 | 정년 연장 | | 부평 2공장 신차 배정, 미래발전계획 제시 | 발전기금 12억 원 출연, 휴가비 인상 |
| | 국내 고용 보장, 국내 투자 계획 제시 | | | |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하계 교섭을 뜻하는 ‘하투(夏鬪)’가 본격화했다. 올해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투자계획, 정년연장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모두 간단치 않은 안건이라 노사 간 첨예한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완성차 업계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거나 요구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와 한국지엠(GM) 노사는 지난 달 상견례를 갖고 교섭을 시작했고, 기아 노조는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발송한 상태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사측과의 갈등으로 1년 넘게 지난해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며 대표노조가 교섭권을 잃었다. 교섭 대표 노조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단협 재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지부는 임금 9만9000원 인상을 공동 요구안에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임금을 동결한 만큼,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임금 인상과 함께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통상임금 150%에 해당하는 성과급과 코로나19 격려금 400만 원 지급을 요구안에 넣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조합원의 문제의식이 교섭에 반영

될지도 관심사다.

현대차그룹 사무·연구직은 대표노조가 생산직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복수노조인 ‘현대자동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사무직 노조)’을 설립했다. 사무직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무직 노조는 정의선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현대차그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교섭권이 대표노조에 있음을 명확히 함에 따라 대표노조 입장에서는 이번 교섭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MZ세대와 사무·연구직 조합원을 어떻게 달래고, 안고 갈 것인지 고민이 많다”라며 “당장 이해할만한 성과급이 주어지도록 하겠다. 연구 직무에 있는 조합원에게 곱맞은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사측을 압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국내 투자 계획 확정과 정년연장 등 고용과 관련한 안전도 핵심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미국 투자 계획을 교섭 테이블에 올려 문제 삼을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8조4000억 원(74억 달러)을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능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사 노조는 미국 투자보다 국내 고용 보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먼저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공장 폐쇄를 경험한 한국지엠 노조도 부평 1, 2공장과 창원공장의 구체적인 미래발전 계획을 확정해 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의 생산 일정이 잡히지 않은 부평 2공장에 전기차 등 신차를 투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금속노조 산하 3사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절대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쌍용차 자구안 투표’ 노조의 선택은?

기술직 50%·사무직 30%
무급 휴직안 내일 결과 발표
‘청산·존속’ 법원 판단 촉박

빠진 반쪽짜리 자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쌍용차 매출은 2조9000억 원 수준, 회사 임직원 규모만 4700명에 달한다. 이보다 매출이 더 많은 르노삼성(약 3조4000억 원) 임직원도 약 4000명 수준. 쌍용차 임직원이 르노삼성보다 오히려 18%나 많다.

반대로 쌍용차가 그동안 보여준 혁신적 노사문화를 고려하면 “인적 구조조정은 가혹하다”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조합원 내부에서도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자구안 투표부터 부결되면 향후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정부 지원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법원의 회생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물론, 투표결과 가결이 돼도 넘어야 할 현안이 줄지어 있다.

현재 회계법인으로 꾸러진 조사위원회가 쌍용차의 청산 또는 존속(매각) 가치를 저울질 중이다. 조사 보고서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 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쌍용차의 청산 또는 매각을 결정한다.

매각이 결정되면 쌍용차는 즉각 매각 주간사를 선정한다. 이후 △인수자의향서 접수 △에비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0월 말) 등을 진행한다. 고비가 줄줄이 이어지는 셈이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2018년 최종식 대표 재임 시절, 사실상 정부의 압박에 밀려 해고자 복직을 무리하게 결정했다”라면서 “정부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포장만 했지만 회사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다. 사회적 가치를 따져주길 바랄 뿐”이라고 성토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기차 충전소·드론 배송·물류 거점 주유소의 ‘무한변신’

미래형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차량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박차



정유소가 주유소를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드론 배송, 물류 거점에 더해 전혀 새로운 모습의 주유소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6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미래형 주유소 및 주유소 기반 수소 드론 배송 시스템 개발(사진)’ 해커톤을 모집했다.

미래형 주유소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작하고, 주유소 거점 드론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행사다. 9일까지 자율 제작을 진행한 뒤 10~12일 본행사를 열 예정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는 이제 기존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물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됐다”며 “정유사들이 새로운 공간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를 비롯해 SK에너지, 에스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주유소를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공간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SK에너지의 주유·차량관리 플랫폼 ‘머핀’은 주유소 손 세척뿐만 아니라 출장 세차, 아파트 단지 내 세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주유소 480여 곳에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주차대행, 자동차 정비·보험 등 다른 차량관리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SK에너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분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에스오일도 곧 주유·차량관리 서비스 플랫폼 ‘유래카(油來Car)’를 출시한다. 유래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주유 주문과 결제할 수 있다. 타이어 구매·장착 서비스도 예약할 수 있다. 그밖에 주차장 예약, 도심 주차대행, 손 세차, 대리운전 호출 등 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쿠팡과 협업해 특정 시간대에 주유소의 남은 공간을 로켓배송 물류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50여 곳까지 거점을 늘릴 계획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삼성SDI 임직원 “이색 취미로 ‘코로나 블루’ 날려요”

일러스트 재능 기부·사격 스포츠
사내 ‘일상다반사’ 캠페인 눈길



삼성SDI는 6일 임직원들의 취미를 소개하는 ‘일상다반사’ 캠페인을 소개해 관심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임직원을 소개해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이 캠페인은 삼성SDI 사내 소통채널 ‘SDI talk’을 통해 1회 진행된다.

현재까지 ‘일러스트 그리기’, ‘실전 사격 스포츠’, ‘가구 제작’, ‘혼라이딩(혼자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진 임직원들의 사연들이 소개되어 큰 이목을 끌었다.

일례로 기흥 본사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근무하는 황예솔(32) 프로는 수준급의 그림 실력을 선보였다. 황 프로는 평소에도 동료들의 가족사진, 웨딩 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려 선물해왔다고 한다. 황 프로는 엄마가 즐겨주면 아이도 즐거울 것이라 생각으로 ‘태고’ 목적으로 일러스트를 시작하

최거용 프로의 자격증과 사격 모습. 사진제공 삼성SDI

게 됐다고 소개했다.

울산사업장에서 배터리 품질 안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최거용(40) 프로의 ‘실전 사격 스포츠’ 취미도 소개됐다.

실전 사격 스포츠란 실탄을 이용한 권총, 소총, 샷건, 에어소프트 건 등을 사용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지 기록을 겨루는 스포츠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IPSC(국제 실용 사격 연합)로부터 정식연맹국으로 승인받았다. 최 프로와 같이 실총 사격 자격을 갖춘 선수는 국내 단 36명에 불과하다.

실총 사격 자격을 획득했지만 코로나19로 대회 참가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언급한 최 프로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 해외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SDI에서는 이러한 캠페인 외에도 전 임직원들의 정기 심리검사와 상담센터 운영 등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임직원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美 전문매체 “LG 통돌이 세탁기 신뢰도 최고”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가 LG전자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세탁기 브랜드’로 선정했다.

6일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돌이 세탁기 브랜드’로 LG전자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로 LG전자는 4년 연속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세탁기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컨슈머리포트는 LG전자 통돌이 세탁기에 대해 △5년 내 고장 날 가능성이 나타내는 예측 신뢰성 항목에서 ‘탁월’ 등급 △소비자 만족도 항목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각각 부여했다. 두 가지 항목에서 각각 탁월과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곳은 LG전자가 유일하다.

통돌이 세탁기에 이어 드럼 세탁기 부문도 신뢰성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각각 최고 점수인 ‘매우 우수’와 ‘탁월’ 등급을 받았다.

특히 LG 드럼세탁기(모델명 LG WM3500CW)는 40여 가지 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LG전자는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2021년 최고의 세탁기’에서 드럼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LG 새 효자사업 '반도체 기판'

반도체 대란에 기판도 '귀한뎀'
부품 계열사 고부가 제품 강화
삼성전기, 1분기 매출 4422억
LG이노텍, 영업익 비중 2배 ↑

글로벌 반도체 공급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까지 부족 현상이 번졌다.

공급 대비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LG 부품사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호황을 맞았다. 이에 두 업체는 고부가 제품을 위주로 사업 영역을 정비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표적인 반도체 기판 제품인 △FC-BGA (Flip Chip-Ball Grid Array)와 △FC-CSP (Flip Chip-Chip Scale Package) 두 부품에 대한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지속했던 PC와 TV 산

업 호조가 올해까지 유지되면서 반도체 필요분이 늘어났다. 실제로 올해 1분기 PC 시장은 10년 만에 최대 호황을 기록했고, TV 제조사들도 줄줄이 호실적을 내놨다.

반면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사양은 점차 높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

미세한 회로를 여러 겹 쌓아 올리면서도 기판 면적은 더 넓은 FC-BGA에 대한 수요세가 강한데, 이는 고난도의 기술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세계 3대 반도체 기판 공급업체로 꼽히는 대만 유니마이크론의 PCB 공장에 지난해와 올해 초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유니마이크론에선 모바일용으로 활용되는 FC-CSP를 주로 생산한다.

이러한 상황은 삼성전기 1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삼성전기 기판사업부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422억 원, 263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77억 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부 내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 비

중도 지난해 78%에서 81%까지 늘었다.

업계에선 201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삼성전기의 기판사업 구조조정 과정이 업황과 잘 맞물렸다고 분석한다. 2019년 지난해 PLP (패널레벨패키지) 사업을 삼성전자에 양도하고, 적자 폭이 컸던 스마트폰 메인기판(HDI) 주 생산라인인 중국 쿤산(崑山)법인을 정리했다.

현재 남은 사업은 경연성인쇄회로기판(RFPCB)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두 가지다. 전자업계에선 올해 RFPCB 사업도 정리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 주도권 잡기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기의 FC-BGA 생산 능력(CAPA)은 일본 이비덴, 신코 등에 이어 5~6위권이다.

LG이노텍의 경우 기판소재 사업부를 통해 FC-CSP를 세계 상위 AP업체한테 공급한다. 매출 비중은 6%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비율은 두 배를 넘는 13%다. 올해 들어선 조금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FC-BGA 제품 개발을 위한 전담팀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우리 기자 we1228@

7월부터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

**국내선 편도당 3300원 부과
항공사, 수익성 악화 '비상'**

항공업계가 다음 달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국내선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항공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당 3300원 부과할 예정이다. 이달 2200원에서 인상되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공유의 깔런당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에 따라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0단계가 적용돼 부과되지 않다가 올해 2~3월에는 1단계가 적용돼 편도당 1100원이 부과됐다. 4월부터는 2단계가 적용, 2200원을 부

과해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통합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73.9달러로 1년 전보다 108.9%, 전월 대비 3.3%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에 국제유가는 올해에만 40% 가까이 올랐다. 2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68.83달러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의 수익성에 부담이다. 진에어 1분기 IR 자료에 따르면 항공연료비는 영업비용의 13%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노선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선 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LCC들은 국내선 특가 할인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이 1만 원대인 경우는 물론이고 무제한 탑승권, 정기권 등도 내놓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Tel. 1661-9316 | dieuamour.co.kr



DIEUAMOUR
No. 3101 Bellezza Line



현대글로벌리스 자동차운반선(PCTC)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글로벌리스

현대글로벌리스, 자동차 운반선 활용해 전기차 특화 운송·벌크 선적 '두토끼'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 현대글로벌리스가 자동차 운반선(PCTC) 사업에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특화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PCTC로 대형 중량화물(브레이크 벌크)을 운송하는 등 화주 편의 극대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글로벌리스는 최근 전기차 맞춤형 해상운송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완성차 시장에 맞춰 이를 운송하는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글로벌리스는 전기차에 특화된 선적·하역 매뉴얼을 수립하고 작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 셀이 차량 하부에 넓게 장착돼 있어 내연기관차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대글로벌리스는 차량의 간략한 정보를 포함해 배터리 충전율과 화주의 요구사항 등을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공유한다. 또 주기적으로 배터리 충전 상태와 소모량, 외관 등의 정보를 화주에게 공유한다. 이를 통해 화주사는 선적 전에 필요한 배터리 충전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대글로벌리스는 해당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한국선급(KR)과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 취급 가이드 공동연구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차 특화 해상운송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글로벌리스는 브레이크벌크를 PCTC로 운송하며 해운사업 매출의 다각화를 일궈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의뢰를 받아 화력·풍력 발전설비를 미국 볼티모어, 독일 브레머하펜 등지로 해상 운송했다. 브레이크 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와 같은 용기에 적재되지 않고 선적되는 화물로, 산업·발전설비, 전동차, 철강제품, 건설·광산 장비 등을 말한다.

PCTC는 다른 선박에 비해 화물의 운송 안정성이 뛰어나다. 수평형 방식으로 화물을 선적할 수 있어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의 수직형 하역보다 화물이 받을 충격과 낙하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 이 때문에 현대글로벌리스의 PCTC 운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복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브레이크벌크 화주에게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듯 현대글로벌리스의 유연한 PCTC 선대 운영은 비계열 매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완성차 운송의 독보적인 역량에 다양한 연계사업까지 갖추게 된 현대글로벌리스는 PCTC 사업 비계열 매출 비중을 올해 55%로 끌어올렸다. 해운 사업에 본격 진출한 2010년(12%)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고 수치다.

유창욱 기자 woogi@

“젊은 피 수혈, 위기 탈출” 대교 ‘2세 경영’ 가속

‘강영중 회장 장남’ 강호준 상무, 신임 대표이사 선임
작년 280억 첫 적자 올해도 부진 ‘분위기 반전’ 나서
에듀테크 사업 확장 집중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대교가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실적 정상화를 꾀한다. 대교의 구원투수로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의 장남인 강호준 최고전략 책임 상무가 발탁돼 사내에서는 기대감도 남다르다. 대교그룹 전체로 보면 대교그룹 오너 2세로의 경영 승계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가 지속하는 등 실적 회복이 더딜 경우 경영 수완에 대한 재평가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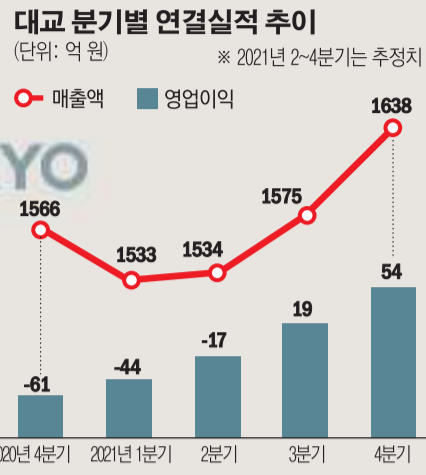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영업 적자를 냈다. 대교는 지난해 연결기준 2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영업이익이 29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상

당하다. 게다가 매출은 6270억 원으로 2000년 73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래 20년 만에 7000억 원을 밑돌았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 외에도 ‘에듀테크’가 교육업계의 경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뒤처진 결과로 평가된다. 에듀테크는 오프라인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에듀테크 회원 수로 입증되는데, 대교의 에듀테크 교육프로그램 가입 학생 수는 작년 하반기 기준 2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17만 명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경쟁사인 웅진씽크빅의 46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강호준 대교 대표이사



이를 반영하듯 대교의 어닝 쇼크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소규모의 적자나 본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됐으나 1분기 영업손실은 4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었다. 그나마 전 분기인 작년 4분기 61억 원에서 적자 규모가 줄었다는 점이 위안거리였다.

최근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교는 선수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7년간 대교를 이끌었던 박수완 대표는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았음에도 지난 3월 중순 실적 부진을 책임지고 물러났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이 강호준 신임 대표다. 강 대표는 2009년 대교 해외사업전략실에 입사해

2013년 해외사업총괄, 2018년 최고전략 책임자를 맡아 그룹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강 대표는 대교의 에듀테크 사업에 힘을 주고 있으며 사내에서는 강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대교 관계자는 “아무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젊은 CEO로 변경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며 “또 대교는 2019년 수학 과목을 시작으로 올해는 국어나 영어 쪽으로 에듀테크(씨릿)를 확장하는 등 이에 비중을 높여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교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흑자를 내는 등 점진적인 실적 회복을 예상한다. 증권업계 컨센서스에 따르면 대교는 2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2분기 영업손실은 17억 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분기 19억 원, 4분기 54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모바일 신작 ‘제2의 나라’로 글로벌 평정”

인터뷰

박범진 넷마블네오 PD

10일 韓·日 등 5개국 동시출시
‘리니지2 레볼루션’ 핵심 개발진
3년간 개발 ‘AI모드’ 등 세 시도



“제2의 나라로 전 세계 다중접속임무 수행게임(MMORPG)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넷마블의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고 있는 ‘제2의 나라’ 출시가 임박했다. 이 게임은 레벨라이브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업한 판타지 RPG ‘니노쿠니’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환상적인 스토리와 지브리 철학이 담긴 세계관이 한 편의 극장편 애니메이션처럼 펼쳐진다. 세계적 거장 ‘히사시 조’ 음악이 더해져 이용자는 명작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넷마블이 2019년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를 출시하며 애니메이션 풍의 게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제2의 나라를 통해 세계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목표다.

제2의 나라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범진(사진) 넷마블네오 PD는 “제2의 나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세운 슬로건은 ‘Beyond Revolution’이다”라며 “국내에서 MMORPG를 좀 더 대중

화시키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국내외의 5개 지역에 출시를 앞둔 제2의 나라는 2016년 모바일 MMORPG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킨 ‘리니지2 레볼루션’의 핵심 개발진이 참여해 큰 기대를 얻고 있다. 약 3년 가량 개발 기간을 거쳐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5개 지역에 동시 출시될 예정이다.

제2의 나라에는 새로운 AI 기능이 도입된다. 서버의 로직이 캐릭터 AI를 제

어해 서버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실제로 플레이하지 않아도 캐릭터는 게임 내에서 계속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 PD는 “제2의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이용자와 어울리고, 영향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AI 기능을 개발했다”며 “이용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제2의 나라 캐릭터는 그 세계에서 살아 움직인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의 나라는 이용자 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게임 재화의 거래가 아닌, 물건 자체의 교환이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스페셜 킷, 코스튬, 이모티콘, 소셜액션 등 상위 콘텐츠의 보상이 제공되는 의미 있는 물품들이 중심이다. 특히 고부가가치의 아이템만 거래되면 유명무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설계도 준비했다.

박 PD는 “제2의 나라는 이용자들간의 소통과 자연스러운 놀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이용자들간의 경쟁을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차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즐겼던 MMORPG들의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꼈었는지 되돌아보고 그때의 즐거움을 제2의 나라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가능한 많은 분께서 제2의 나라를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LG U+, 양자보안으로 암호 막는다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사업’ 참여... 공연 예매 등 활용

LG유플러스가 양자보안체계를 업그레이드해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 응용서비스에 양자보안을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코워버(10G급 전송장비) △서울대학교 크립토크랩(PQC알고리즘) △ICTK(PUF) △드림시큐리티(인증·암호화 모듈) 등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산업·의료분야 전용회선에서 검증한 양자내성암호를 공연·엔터 분야 응용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한다.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엔드 투 엔드 암호기호환 방식은 전송 거리에 제약이 없고, 향후 해저케이블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양자키교환(QKD)과는 달리 이미 구축한 전송망에 선로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중계 노드를 만들 필요 없이 양단(兩端) 구성만으로 보안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USB에 넣었던 양자난수기반 물리복제방지칩(PUF)을 유심(USIM)과 IC 카드에 탑재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연티켓 예매·구매자 인증 강화 △안면인식 활용 산업체 출입 보안 등 응용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PUF-USIM은 복제할 수 없는 물리적 고유키를 이용해 인증서를 내장하는 PUF 칩이 USIM 안에 들어간 보안이 강화된 유심이다. 소형 디바이스, IoT 기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티켓예매 서비스를 예로 들면,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공연 티켓을 예매하면 예매정보 양자내성암호가 적용된 전용회선을 거쳐 LG유플러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구매정보 서버로 전달된다. 공연 전 고객이 티켓을 발권할 때는 양자보안이 적용된 PUF-USIM 인증기술로 티켓 구매자임을 인증하게 된다. 암호 거래 방식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진공, 수출bauer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수출bauer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8일까지다.

수출bauer사업은 중소bauer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 모집에는 3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900여 개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고,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

bauer사업과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바이오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혁신bauer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전년도 수출 규모 등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수출bauer사업을 지급한다. 기업은bauer사업을 활용해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대원 기자 leedw@

KISA ‘암호모듈검증’ 인력양성 전문교육

28일부터 5일간 온라인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암호모듈 검증 암호 전문인력 양성 및 암호산업 육성을 위한 ‘2021 암호모듈검증 전문교육’을 기초·심화과정으로 나눠 2회 실시하며, 이번 상반기 기초교육을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암호모듈검증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 및 유통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KISA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초 암호이론 및 암호모듈 검증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암호모듈검증 기초교육을 시행했다.

작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70.2%가 ‘암호모듈 개발 시 본인의 직무 활용에 도움이 된다’, 74%가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이해도 및 지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올해 두 번째 운영하는 ‘암호모듈검증

전문교육’은 전년도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초과정 외에도 심화과정을 별도 편성했다.

먼저 상반기 ‘기초교육’ 과정은 △기초 암호 수학 △대칭키, 공개키 등 암호 알고리즘 △암호모듈검증 제도 및 시험 방법론 △암호모듈검증 시험 및 검증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하반기 ‘심화교육’은 암호모듈 구현에 초점을 맞춰 구현 시 주의사항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초교육 과정은 암호 이론 및 암호모듈검증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최대 +50yd 더나가는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BIG BANG

문의) 1544-8070

‘친정부 코드 인사 후폭풍’ 檢 안팎 부글부글

변협 “이성운 서울고검장 승진’ 정치적 중립 훼손” 성명 중간간부 인사까지 이어질 듯... 변필건·이정섭 거취 주목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가 최근 실시한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대해 발탁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인사”, “방탄 검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며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인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주요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락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검장이 떠난 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운다. 이 검찰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불참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신입 수원지검장에는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겨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고시 폐지 후 법관 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문 정부 임기 말 주요 수사의 길목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

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특수통이 일부 기용되는 등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 인사라는 우호적인 평가도 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의 후폭풍은 조만간 있을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1년 동안에는 전보 조치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이 대부분 교체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종용 기자 deep@



태극기 찾기 힘든 현충일

제66회 현충일인 6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게양된 조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회식 참석했다 사망한 공군 부사관 ‘과로사’”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원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후 A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된 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벽리증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2019년 4월 A 씨의 공무와 사망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6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1.48시간 근무했다”면서 “망인이 사망에 근접한 시기인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고 진급 심사를 위해 휴무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김오수-김진욱 내일 첫 회동 ‘이첩 갈등’ 해소되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 주 첫 만남을 가진다.

김 총장은 8일 김 처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조건부 이첩’을 두고 줄곧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두고도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 등도 이송이나 이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했다. 해당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김 총장은 일단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두 기관장의 만남이 공-검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합참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회동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각 기관을 상대로 내사·수사 중인 사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용 기자 deep@



고두현의 산책자를 위한 인문 에세이

『냉면꾼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우리 삶에 깃든 눈물과 해학, 연민과 사랑……
시인의 ‘생각 산책’ 길에 펼쳐진 이야기 잔칫상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다!



“아,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해학이 있고, 연민과 사랑이 있고, 절망과 고통이 있구나. 이야기가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어 열심히 먹다보면 내가 그 동안 성실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내 삶 또한 진실한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문득 깨닫는다.”

- 정호승(시인)

냉면꾼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 고두현 지음 | 14,800원 | 256쪽

문학의숲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영화빌딩 | 전화 02-325-5676 | 팩스 02-333-5980 | 전국 모든 서점에서 구매가능합니다.

광고심의필 : 2020-1540-000500



체함
배함
설사



넌 끝났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같은 증상들을 제압한다~
동성제약 **정로환F**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연원호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최근 유럽에서 '중국 이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한국마저 반중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중국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가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면 대중 견제 내용을 담아냈다. 내용만 보면 미국이 대중 견제에 한국의 동조를 이끌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표현에 주목하면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원론적인 동조를 보였다고 해석할 만하다.

(安美經中) 노선을 미국이 흔들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협력과 핵심기술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 강화 등의 협력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중국은 안보 분야보다 더욱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왔다. 하지만 올해 2월 회의에는 라트비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 정상이 불참하며 사상 최저 출석률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한국마저 반중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중국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방로 김희정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 자문센터장



저축, 투자, 그리고 자산관리

이투데이, 말투데이

팬데믹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전과 달라졌다.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을 재고 'QR체크인'을 하며, 5인 이상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은 게 언제인가 싶다.

으로 밀어올린 자산 가치는 조심스런 거품 논란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을 걱정하게 한다. 지난달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지역별로 편차는 크지만 주요국의 경제규모가 내년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안감에 투자의 방향을 고민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자산 시장은 어디에 투자를 하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면, 올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장을 이기기만 노획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지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예측이 어렵고 복잡한 시장의 이슈들이지만,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다.

☆ 장 파울 리히터 명언 "소심한 자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겁쟁이는 위험이 닥쳤을 때, 용기 있는 자는 위험이 지난 후 두려움을 느낀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7세부터 시작해 약 30년간 중단 없이 쓴 5천 쪽 분량의 육필원고를 편집해 책으로 엮어내 유명해졌다.

밈(Meme)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출간한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처음 나온 용어다.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Mimesis)와 유전자(Gen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퍼드는 문화적 현상, 콘텐츠 등을 의미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었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특히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언제 본격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예민하다. 연일 언론과 매체를 통해 전문가들이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뛰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우려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 그동안 각국에서 시장에 풀어진 막대한 자금을 언제가는 줄일 것인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자산들의 가격이 거품일까 걱정되다 보니, 특히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언제 본격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예민하다.

하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반박에도 밈 주식은 막대한 기대감만으로 뛰어드는 승산 낮은 게임에 불과하다.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빚을 내 가상화폐, 밈 주식 등 고수익 투자처에 전부 쏟아야 한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다.

☆ 시사상식 / 파레콘(Parecon) 참여경제 (Participatory Economics)의 줄임말.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계획경제 체제도 아닌 새로운 경제체제를 뜻한다. 참여경제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모델을 차용했다.

기사수첩



이인아 자본시장부/ljh@

밈 주식, 씹쓸한 광풍

락한다. 이른바 '레딧주'라 불리는 AMC 엔터테인먼트, 게임스탑, 블랙베리, 베브베스 앤비온드, 마이크로비전 등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밈 주식에 열광하는 건 '제2의 테슬라'를 찾아 나선 전 세계 2030 개인투자자들이다. 레딧에 거론되는 종목 중심으로 젊은 투자자들이 빠르게 추격 매수하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밈 주식에 열광하는 건 '제2의 테슬라'를 찾아 나선 전 세계 2030 개인투자자들이다. 레딧에 거론되는 종목 중심으로 젊은 투자자들이 빠르게 추격 매수하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날 섰다 원래 영화인들이 쓰던 말이다. 밤이 나오는 영화 장면은 꼭 밤에만 찍어야 했다.

SAMSUNG



삼성가전을 언제나
새것처럼 즐기는 방법



삼성케어플러스 | 가전/TV

걱정까지 씻어주는 전문세척 | 처음 성능처럼 관리하는 가전케어 | 안심까지 옮겨주는 이전설치



스팀세척



UV살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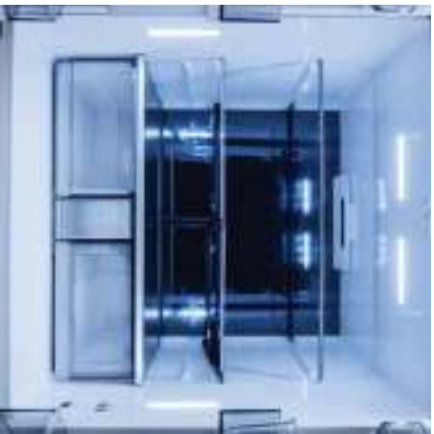
이전 설치



고압세척



플터 교체



삼성케어플러스 구매문의는 samsung.com 과 디지털포라지에서